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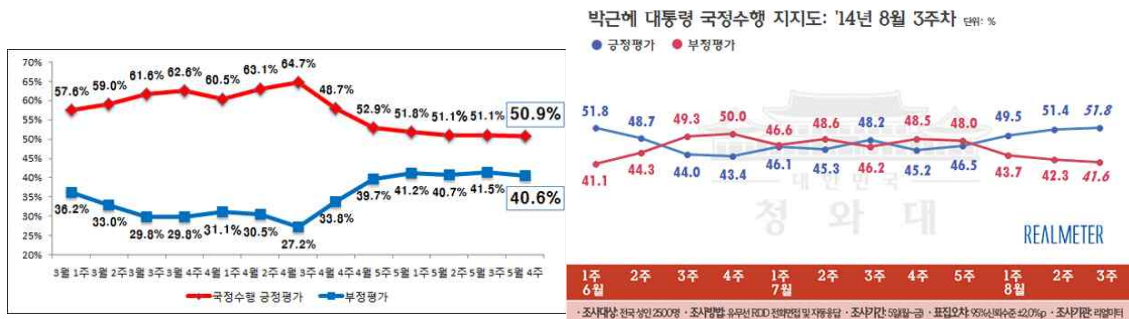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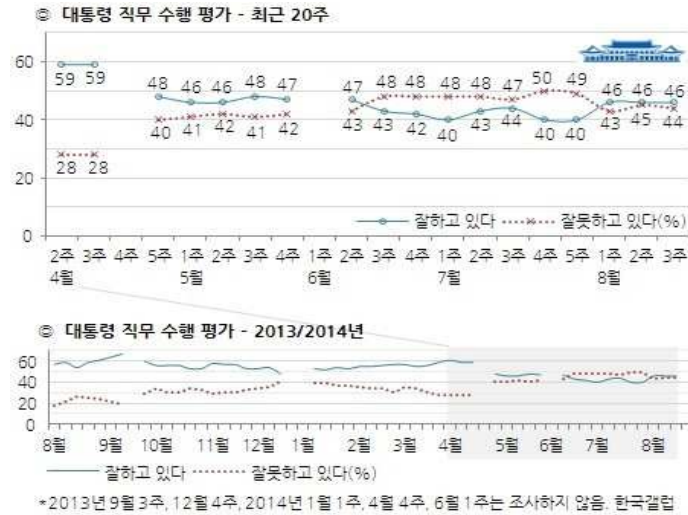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위 상반기 정세브리핑

2014.8.30.

공식정치

1.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3/26)과 두 차례 선거 - 안·김의 존재감과 그에 못지않은 정당지지율
 -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으로 새민련 출범: 초기에는 정당지지율이 39.7%로 44.8%인 새누리당에 5% 정도까지 추격을 하였으나, 계파갈등과 세월호 국면에서 의석수에 걸맞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지율 추락(현재 정당지지율: 새누리당 47.7%, 새민련 16.6%(8/29, 리얼미터))
 -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위 수준에서는 2010년 선거와 비슷하였으나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감소: 2014년 기초자치단체장 새누리 117석, 새민련 80석 / 2010년 기초자치단체장 한나라당 82석, 민주당 92석
 - 특히 진보정당의 부진이 두드러짐: 2014년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51명 / 2010년 광역의원 27명, 기초의원 137명
 - 1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1곳에서 승리해 압승(7/30): 새누리당 158석, 새민련 130석
2. 박근혜 정부 개각과 인사참사 - 박근혜의 관피아 척결 ‘데스노트’
 -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관피아 문제를 해결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대국민 담화(5/19).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과 책임행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되면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5/28).
 - 전관예우 논란 안대희(5/29), KBS의 망언보도 논란 문창극(6/24) 총리지명자 잇따라 낙마. 사의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조치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6/26)
 - 논문표절 및 자질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첫 지명 철회 사례가 됨(7/15)
 - 음주운전, 청문회 거짓진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의 추문 폭로 직전 사퇴(7/16)
 - 인사참사 정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초반까지 급락

3.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도 추이 - 노 답



4. 세월호 특별법 논란 - 새민련, 여당 제2중대에 당당히 등극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19일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합의했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동수의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의안 반대. 새민련 의총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유보하기로 결론
-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한 바 있지만(8/7), 협상 내용에 유가족들이 여야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 한편 일반인 유가족 측은 2차 여야합의 세월호 특별법안 수용 결정(8/25)
-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두 차례(8/25, 8/27) 만났지만 수사권·기소권 여부에 이견을 보이며 진전을 이루지 못함. 9/1 3차면담 예정
- 청문회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행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짐

5. 기타

- 새 원내대표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민련 박영선 당선(5/8)
- 김무성, '친박' 서청원 누르고 새누리당 당대표에 당선(7/14)
- 박근혜 2기 내각 사정정국(8/22): 불법 정치자금 등 박상은(새누리), 철도 부품 납품 비리 조

현릉(새누리), 입법로비 김재윤(새민련) 구속, 입법로비 신계륜, 신학용(새민련) 불구속, 전현직 의원 치협 입법로비 의혹 고발

노동

1. 희망을 보여준 비정규직 투쟁,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침묵한 정규직 노조

- 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엄호석 조합원의 자결 및 삼성분관 노숙 농성(5~6월)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엄호석 분회장은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자결(5/17). 경찰이 고인이 있는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을 탈취(5/18).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감(5/19)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상반기 가장 핵심적인 노동자 투쟁으로 자리매김
- ②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씨앤엠 정규직, 씨앤엠 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희망연대노조에 가입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과 노숙농성을 이어감: 티브로드 협력업체가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응해 6/17 직장폐쇄 단행하면서 케이블방송 3개지부(티브로드지부, 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1,200여명 총파업 돌입 및 본관 앞 노숙농성(7월).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철회, 고용보장, 생활임금, 안전한 일자리 등을 요구
- ③ 건설노동자 파업
 - 건설 현장의 위험한 여건 개선과 산업 재해를 줄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3만여명 동참 추산)
 -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당초 3일에서 하루 만에 파업 종료(7/22)
- ④ 기타
 - 청소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경비·시설정비·주차관리 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급 인상, 원청인 대학과의 노동인권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14곳의 노동자 1천6백여 명이 동시에 하루 파업(3/3). 인덕대는 약 한 달 간 파업으로 실질임금 약 10% 가량 인상
 - 홈플러스 노동조합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8/29부터 8/31까지 파업에 돌입: 전국 40여 개 매장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 연초에도 단체협상 투쟁에서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0.5시간제 폐지 쟁취(1/9)

⑤ 정규직 노동자 투쟁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2.25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4.1%로 부결
- 민주노총 7.22 동맹파업의 주 대오는 건설노조(4만 중 2만 이상)
- 공공기관 정상화에 반대하여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투쟁: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3/22),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6/17), 공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8/27), 다음달 3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하루 총파업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양대노조도 다음달 11일 경고파업 및 18일 총파업 예고
-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 교육부는 3차례 200여 명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6/26). 이후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박근혜 퇴진을 걸고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 발표(7/2)
- 병원노동조합 파업: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 통상임금 관련 임금단체협상에서 쌍용차가 완성차 최초로 통상임금 확대안에 합의(7/24). 한 국지엠(8/20)도 포함, 르노삼성(8/27)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조건으로 합의. 현대기아차는 8/22 2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통상임금 확대 요구하며 12시간 부분파업(8/28)

2. 철도노조 파업 철회 및 대량 징계 - 정치권에 기댄 어설픈 타협이 가져온 철저한 패배

-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기로 전격 합의(‘13.12/30)
- 코레일은 149명을 해고하고 452명을 중징계 했으며 파업참여자 8천 명 모두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고 1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 체결(8/18): 지난해 임금동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15개 과제 25개 항목을 개선하기로 합의(산재로 인한 휴업과 질병휴식시 법정기본급 70%만 지급, 본인 사망 시 경조사비 기존 1천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배우자나 자녀 사망 시 500만 원 지급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업무상 질병휴직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생리휴가와 유산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중학교 학비지원 폐지 등). 회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130억 원을 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압박을 보임에 따라 해고자 복직에 대한 요구없이 합의

3.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3/19) 및 통상임금 논쟁 - 이거라도 따내야...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발표(1/23):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에 따른 고용노동부 해석임. 고정성 요건 충족 못하는 정기상여금(성과급 포함)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대하여 ‘중대형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등 신의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은 새로운 노사협의 이전에 추가 임금청구를 할 수 없음 등
-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연장에 따라 정부가 임금 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 매뉴얼 발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대체로 공감

4.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6/19) -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 지난 2013년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 시적으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유예되었지만 이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법적 지위 박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999년 노정합의에 의해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
-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 결정(7/17)
-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8/20)(* 이는 교육부가 사·도교육감을 대신해 사·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권한 쟁의 논란 우려)

5. KBS 양대노조 파업과 김환영 사장 해임 - 은(는) 문창극 사퇴

- 청와대의 보도통제 외압의 당사자인 김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KBS 양대노조가 최초로 동시에 기자, 피디, 경영인, 엔지니어 아나운서 촬영감독 등 모든 KBS구성원이 함께 하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5/29). KBS 노동조합원 2,600여 명과 새노조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해 전체 직원의 80%가 참가
- KBS 이사회에서 김환영 사장해임안 가결(6/5)되면서 파업 종료

6.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새로운 이름

- 정부는 기관장을 압박해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13.12/31).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체적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자산을 매각해 외형을 줄이는 작업을 추진. 특히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삭감과 정원 동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이 포함
- 노동자들은 부채 삭감을 빌미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공격할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
-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4/29): 2017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평균 71만원 줄어들고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87%로 감소, 10월까지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임금을 동결

7. 기타

- 대법 “해직자 포함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반려 정당” 판결(4/23): 해직자 포함된 전공노 설립 무산(*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공무원노조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
-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고시(8/4): 올해대비 7.1% 인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올해 5,210원보다 28.6% 인상된 6,700원 요구한바 있음

사회일반

1.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및 수사결과 발표 - 결국 가재는 게 편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인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등 3건의 증거에 대해 중국정부가 조작된 것이라는 공식 답변을 민변이 공개하면서(2/14) 국정원의 조작에 대한 의혹 증폭
- 국정원 압수수색(3/10): 2005년 불법 도청 사건과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 이후 세 번째
- 검찰은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기도한 과장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가운데, 검찰은 대공수사국장과 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4/14)
- 피고인 유우성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4/25)

2. 대형 여객선 ‘세월호’ 침몰(4/16) -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
- 172명 생존, 294명 사망, 10명 실종(8/29 현재)
-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등이 세월호 침몰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고 초기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 그리고 해경과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결국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남
-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국가정보원과 세월호의 관계 역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8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발족하여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받아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7/7)

3. 오바마 방한(4/25) - FTA나 TPP보다 이슈가 된 하늘색 정장

-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 완전이행'에 전격 합의하고 박근혜정부는 'TPP 가입협조' 얻어냄. 저작권 이양 시기 재검토에 합의(당초 2015년 12월)
- 방한 전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돼지고기 관세와 자동차 분야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TPP 교섭 타결 불발

3.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력 문제 -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 임모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6/22): 22사단 최전방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5명 사망, 7명 부상. 관심병사인 임모 병장이 ‘따돌림’, ‘기수열외’ 등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
- 윤모 일병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4/6): 7/31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서 가혹행위 및 구타에 의한 뇌진탕 사망 의혹 제기 이후 파장을 몰고 옴
- 관심병사 자살사건이나 공군, 해병대, 의경 등에서도 속속 가혹행위 정황 포착되며 군 인권 문제가 세월호 침몰 이후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되었음
-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안’ 발표(8/13): 휴전선 GOP 근무 병사들에게 면회 허용, 부대 내 곳곳에 CCTV 설치, 가혹행위 신고 포상제도 등의 내용이 담김

4.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8/12) - “경제회생의 골든타임”??

-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15조 원대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1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
-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지리산과 설악산 등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보건·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 등(의료부분 제외)

5. 기타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2/17): 무너져 내린 강당 건물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그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강당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 부산외대 학생 10명 사망, 124명 부상
- 작년 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이어 잇따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국내 인터넷 사이트 200여 곳을 해킹해 1,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해커 조직이 경찰에 검거(2/26),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3/6),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포스단말기 해킹 사고로 10여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4/11)
- 아시아안보회의(5/31):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 논의, 저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워크플랜’(업무계획)에 합의

-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전체 17명 중 13명의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은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경북도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 정직 1개월 징계, 8/29).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사고 취소를 1년 유보, 경기지역 초중고 10곳 가운데 8곳이 9월 1일부터 9시 등교 시행
- 순천서 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7/22)
- 프란치스코 교종 방한(8/14)

경제

1.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본격 출범(1/10)

- 민영화 논란 속에 지난해 말 최장기 22일간 철도파업의 빌미가 됐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10일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
- 열차 운행은 2016년에 신차 27편성으로 시작해 2017년부터 32편성으로 열차운행 횟수를 늘릴 방침

2. 가계빚 1천조 시대(2/25)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신용은 1천21조3천억 원(* 2004년 말 494조2천억 원이던 가계부채는 9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 한국은행이 5/27에 발표한 ‘2014년 1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024조8000억 원으로 1분기 만에 3조 증가
- 이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가계빚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차입규모는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8곳의 평균(69%)보다 월등히 높은 편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확정(2/25)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와 고용률 70%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밝힘
- 우선 공공 부분부터 개혁하겠다고 하며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고,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

4. 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개최(3/20) 및 41개 항목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3/27)

- ‘규제개혁 끝장토론’서 제시된 52개 과제 중 41개 연내 해소하기로 함
- 보건의료관련 9개 항목: 종합병원만 설치가 가능한 종합의료시설에 전문병원 및 일반병원도 입주 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완화, 건강관리기능 센서 장착 스마트폰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규제 완화, 해외진출 자회사 지원 등

5. 우리은행 민영화방안 발표(6/23)

- 우리은행이 전략적 투자자(경영권 입찰)와 재무적 투자자(소수지분 입찰)를 대상으로 한 ‘투 트랙 방식’으로 연내 분할 매각
-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되는 56.97%의 우리은행 지분 전량이 경영권 지분(30%) 매각과 소수 지분(26.97%) 매각이 따로 실시

6. 박근혜정부 제2기 최경환 경제팀 출범(7/24)

- 공공부문 정상화 강도 높은 개혁 지속, 규제개혁 성과 가시화,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등의 내용 포함

7. 기타

-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 내년 상반기 상장(6/3): 삼성에버랜드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5.1%)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3세 승계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삼성그룹은 현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뤄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음)
- 한-캐나다 FTA 가서명, 내년 발효 전망(6/13):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측 수석대표가 FTA에 가서명했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한-캐나다 FTA는 올 하반기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
- 쌀 시장 개방, 내년부터 관세화(7/18):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 ‘쌀 관세화’는 1986~1988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관세만 내면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연말에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것에 따른 것

국제

1. 우크라이나 내전 - 2014년 ‘거대한 체스판’

- 2013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로 시작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친러 성향)이 탄핵되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군사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가 발생.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회가 비준한 크림 합병 조약에 서명
- 그러는 가운데 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갈등 고조(3/2)
- 도네츠크와 하리코프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親)러시아계 주민들이 분리주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분리주의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특수부대원 급파(4/7)
- 한편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으로 추측되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7/17)
-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 방위, 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안을 합의(7/29). 한편 푸틴은 EU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시베리아 향로 이용 금지 및 농수산물 수입 제한 등 보복조치 시사(8/7)
-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 진격설(8/29): 이에 따라 반군이 남부지역까지 장악. 우크라이나는 올해 폐지했던 징병제를 가을부터 부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EU) 등에 지원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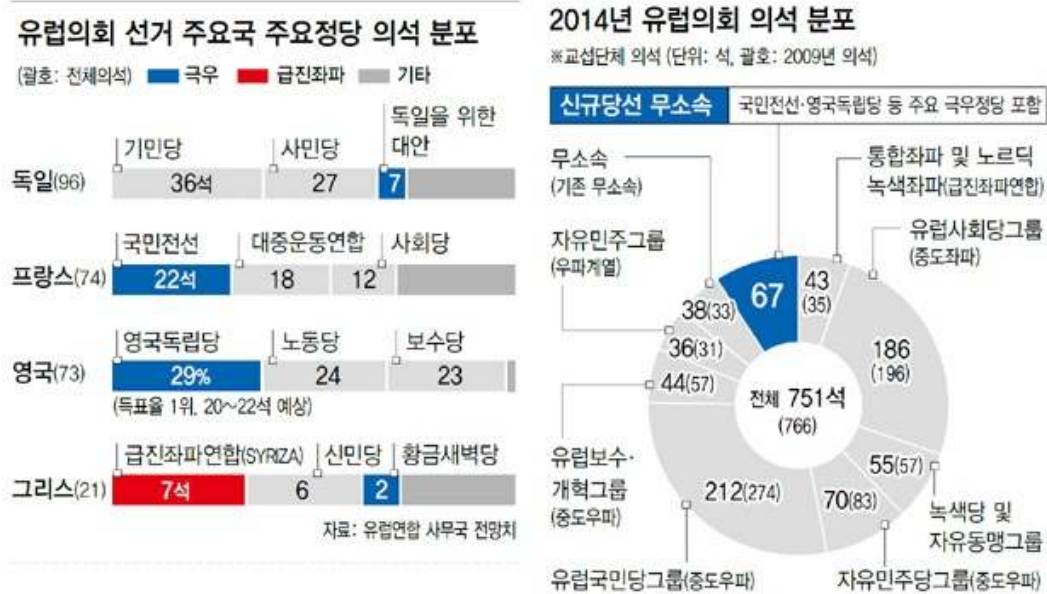
2. 태국 반정부시위와 군부 쿠데타 - 왕정종식 후 19번째 쿠데타, 성공률 63%

- 2001년 탁신 총리 집권 이후 반탁신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옐로셔츠)와 친탁신단체인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레드셔츠)의 시위로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이 반복되며 정치적 불안 지속. 작년말 잉락총리 퇴진과 탁신체제 근절 요구 반정부 시위가 이어짐. 올해 초부터 반정부 시위대는 방콕의 교통과 정부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해 방콕 셧다운(shut-down, 잠거) 시위 시작(1/13~3/1)
- 태국 헌법재판소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잉락 친나왓 총리를 권력남용으로 실각(5/7). 전 총리를 지지하는 친정부, 친탁신 진영(레드셔츠)의 극심한 반발. 군부는 반정부 세력(옐로셔츠)과 친정부 세력(레드셔츠)간 유혈 충돌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5/20)하고 이틀 후 쿠데타를 선언. 태국 왕실이 쿠데타 승인하여 프라윗 육참총장을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인정(5/26)
- 총선이 실시되는 내년 10월 전까지 태국 과도의회는 총리 선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프라윗 육참총장을 총리로 선출(8/21)

3.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급성장(5/27) -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좌우의 정치적 양극화

- 프랑스·영국·덴마크에서 유럽연합(EU) 해체와 유로화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1위를 기록: 2008년 유럽 경제 위기 이후,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 중도 좌·우파의 친(親)EU 명분론에 대해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나타내고 EU의 이민 자유화 정책과 그로 인한 일자리 경쟁 심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그리스를 비롯해서 반EU 성향을 가진 좌파블록도 약진



4. 日 군위안부 동원인정 ‘고노(河野)담화’ 검증 논란(6/20) - 아베의 ‘보통국가’①

-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번복하기 위한 것
-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 보고서 중의원 제출.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검증 결과 발표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에 비유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이 ‘동지적 관계’이고 전쟁의 ‘공범’ 등으로 기술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논란이 됨

5. 일본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와 미국의 지지 - 아베의 ‘보통국가’②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각회의 결정안에 합의 (7/1)(※ 집단적 자위권: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해 일본 존립이 명백히 위협받으면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자위 조치로 헌법상 허용)
-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위헌이므로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는 사실상 무력화
- 미 국무부 대변인과 국방장관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지지(7/12)

6.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및 장기 휴전 합의 - 아! 팔레스타인

- 지난 6월 실종된 이스라엘 10대 3명이 하마스 세력에 납치 살해된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 차원에서 봉쇄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시작(7/8)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집트의 중재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8/27). 이로써 50일 동안 교전을 벌이며 2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교전을 멈추고 휴전에 돌입
-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과 자유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7/23)(* 팔레스타인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에는 46개 회원국 중 아랍 국가와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이 찬성,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남한과 유럽 국가를 포함한 17개국은 기권)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반대하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위(8/9)는 15만 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 세계 각지에서 최대 100만 명이 공습반대 시위 벌임. 한편 브라질, 페루,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칠레 등 남미 5개국은 이스라엘 대사를 철수시켰고(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2009년에 철수), 칠레 정부는 이스라엘과 무역협정 교섭회의를 중단

7. 미군 철수 3년만의 이라크 내전과 오바마의 이라크 공습 승인 - 하나의 이라크는 없다

-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점령하고 이라크 최대의 정유공장을 점거(6/10)하고 시리아 남동부에서 이라크 북서부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에 이슬람국가(IS)의 설립을 선포
- 미군 철수 후 말리키 정권의 시아파 독재가 계속되자 이에 대응해 일부 수니파가 다시 무장항쟁 태세를 갖춘 것이 IS. 유럽인 납치 후 받은 몸값, 알 아사드 정부의 은근한 지원¹⁾, 수니파 국가들의 지원(쿠웨이트, 카타르 등), 터키 정부의 자국 통한 외국인들의 IS 합류 방조 등으로 급성장
- IS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2011년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을 공습할 수 있도록 승인(8/8). 단, 2011년 말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수한 미군을 재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IS는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 기자 참수(8/20)
-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이 초읽기라는 보도가 있으나 이라크와는 달리 미 항공기가 시리아 영공을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

1) IS는 수니파, 시리아 알 아사드 정부는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알 아사드 정부는 IS에 대한 공격을 자제한다든가 교도소의 과격분자들을 석방시키는 등 반군 간 내분을 조장하기 위해 IS를 은근히 지원해옴. 그 결과 시리아 온건파 반군세력은 시리아 정부군과의 전투보다는 IS와의 대결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형편이라고 함, ‘이라크, 미군 철수 3년 만에 내전 속으로’, 2014.6.21., <프레시안>

진보정당

1.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공판 - RO도, 음모도 없는데 내란은 남은 ‘선동’적인 재판
 -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2/17)
 -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게 20년 구형(7/28): 1심 재판부가 혁명조직 ‘RO’가 내란을 모의한 혁명 조직으로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자 이 의원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
 - 8/11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소송

- 현재 12차 변론까지 진행(8/26)
- RO 사건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남은 증인에 대한 심문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3~4차례 정도 공개변론을 진행하면 변론 절차가 거의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때 내세웠던 ‘진보당=RO’라는 논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음

3. 존재감을 잃은 진보정당

- 두 차례 선거에서 몰락하며, 사실상 새민련 중심의 야권연대의 파산
- 진보정당 내외부에서 진보정당의 재구성 방식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있음

4. 기타

-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민사소송 당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최종 승소(6/12)